



60년을 한결같이 100년을 변함없이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

[제25회 한국세무포럼]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

일시 : 2022. 10. 28.(금) 14:00
장소 :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

개회사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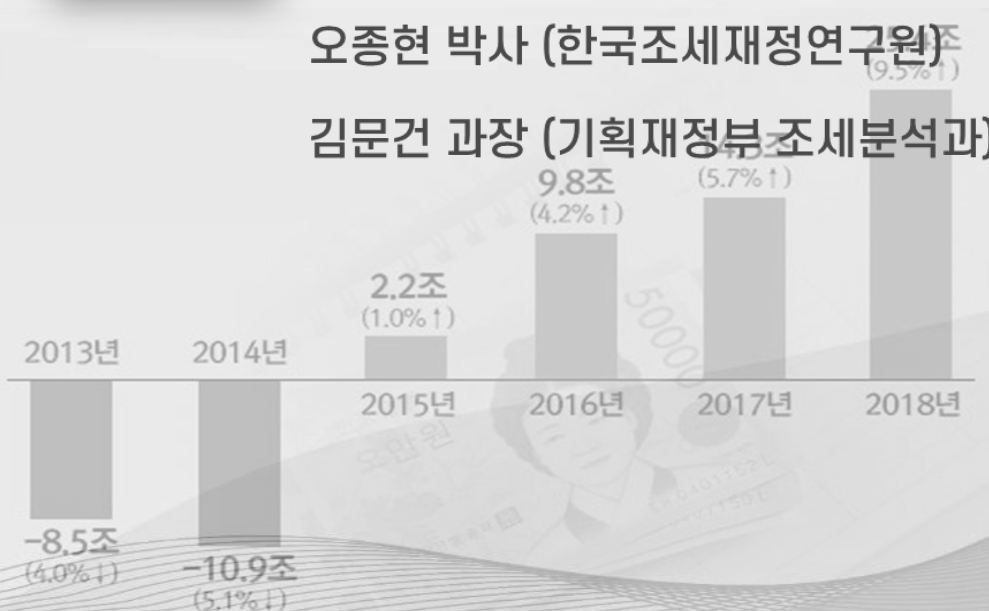
좌 장 김갑순 교수 (동국대)

발 표 정다운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토 론 성명재 교수 (홍익대)

오종현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문건 과장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공지사항] * 포럼 영상 촬영 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 탑재 예정

* 발표자료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연구상담 → 한국조세연구소 → 한국세무포럼 게재

진행 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등록 및 안내
14:00-14:10	(개 회)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14:10-15:10	좌 장 김갑순 교수 (동국대) 주 제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 ▣ 발 표 정다운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15:10-15:40	지 정 토 론 성명재 교수 (홍익대), 오종현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 김문건 과장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15:40-15:55	자유 토론
16:00	(폐 회)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목 차

◎ 주 제 :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

발표문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	9
토론문	성명재 교수 (홍익대)	25
토론문	오종현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	30
토론문	김문건 과장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40

주 제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

| 주제 발표자 | 정 다 운 박사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

| 정다운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

정다운 (dwjung@kipf.re.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1 / 31

개요

정부가 604조원에 달하는 2022년 '초슈퍼예산안' 에서 338조 6000억원의 세입 예측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2021년 본예산 세입 전망치인 282조 7000억원과 비교하면 55조 9000억원 (19.8%)이나 늘어나면서다. 1년 사이 세입 전망이 20%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면서 지출 증가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낙관적인 세수 추계를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 중앙일보, 2021.9.6-

2 / 31

개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과 그 영향이 지속된 2021년을 제외하면 KDI의 예측이 가장 크게 벗어난 해는 2012년의 1.8%p(전망치 3.8%, 실적치 2.0%)였고, 가장 오차가 적었던 해는 2016년의 0.1%p(3.0%, 2.9%)였다. 한은의 12년간 연평균 오차는 0.88%p 였다. 역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2010년(1.7%p)과 2012년(1.7%p) 오차가 가장 컸다. - 매일경제, 2022.10.12-

3 / 31

개요

-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지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양의 상관성(positive association)이 있음
- 세수 추계 정확성 제고 →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제고 (?)
- **정책목표**: 세수 추계값의 pin-point 정확성 확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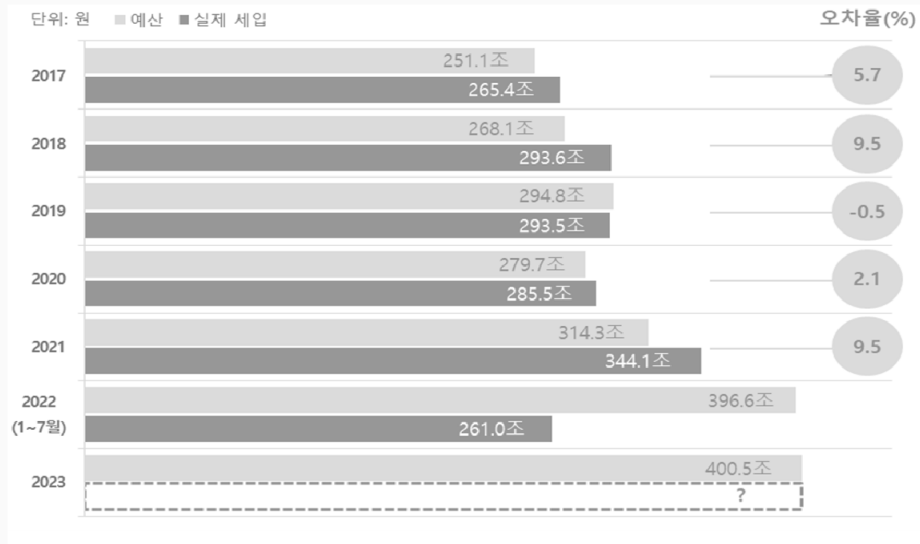
4 / 31

개요

- 경제 성장 전망과 기업의 투자 결정 및 가계의 소비 결정과 양의 상관성(positive association)이 있음
- 경제 성장률 전망 정확성 제고 → 기업의 투자 결정의 적시성 확보 (?)
- **정책목표**: 경제 성장률의 pin-point 정확성 확보 (?)

5 / 31

세수 예산 및 실적



6 / 31

세수 예산 및 실적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적	265.4	293.6	293.5	285.5	344.1	-	-
본예산	242.3	268.1	294.8	292.0	282.7	343.4	400.5
추경예산	251.1	-	-	279.7	314.3	396.6	-
오차율(본)	9.5	9.5	-0.5	-2.2	21.7	-	-
오차율(추)	5.7	-	-	2.1	9.5	-	-

주: 2023년은 정부예산안 기준임.

7 / 31

2021년 예산 및 세수

(단위: 억원)

국세수입	본 예산	추경예산	실적	본 예산 대비 오차	오차율 (절대값)
총국세	2,827,425	3,142,816	3,440,782	613,357	21.7
소득세	898,160	994,743	1,141,123	242,963	27.1
신고분	333,633	419,424	526,974	193,341	58.0
- 종합소득세	164,776	164,776	159,902	-4,874	3.0
- 양도소득세	168,857	254,648	367,072	198,215	117.4
원천분	564,527	575,319	611,336	46,809	8.3
- 이자	25,577	25,577	22,140	-3,437	13.4
- 배당	29,831	40,623	46,490	16,659	55.8
- 근로	435,228	435,228	472,312	37,084	8.5
- 기타	70,731	70,731	70,394	-337	0.5
법인세	533,054	655,465	703,963	170,909	32.1
- 원천분	397,248	513,694	554,679	157,431	39.6
- 신고분	135,806	141,771	149,284	13,478	9.9
상속증여세	90,999	119,298	150,062	59,063	64.9
- 상속세	33,377	56,368	69,447	36,070	108.1
- 증여세	57,622	62,930	80,614	22,992	39.9

8 / 31

2021년 예산 및 세수

부가가치세	666,531	693,474	712,046	45,515	6.8
개별소비세	100,655	100,655	93,638	-7,017	7.0
증권거래세	50,861	82,820	102,556	51,695	101.6
인지세	9,467	9,467	9,598	131	1.4
주세	32,492	32,492	26,734	-5,758	17.7
교통세	156,903	156,903	165,984	9,081	5.8
관세	83,472	83,472	82,270	-1,202	1.4
교육세	53,066	53,066	51,039	-2,027	3.8
농특세	54,707	63,903	89,000	34,293	62.7
종부세	51,138	51,138	61,302	10,164	19.9
과년도 수입	45,920	45,920	51,465	5,545	12.1

9 / 31

세목별 실적

(단위: 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총국세	2,653,849	2,935,704	2,934,543	2,855,462	3,440,782
소득세	750,657	844,616	835,620	931,087	1,141,123
신고분	311,825	355,053	328,791	397,288	526,974
종합소득	160,488	174,826	167,780	160,730	159,902
양도소득	151,337	180,227	161,011	236,558	367,072
원천분	438,832	489,563	506,829	533,799	614,149
이자소득	20,804	22,217	26,179	26,189	22,140
배당소득	24,365	27,603	29,588	32,112	46,490
근로소득	340,339	379,996	384,660	409,051	472,312
기타원천분	53,324	59,747	66,402	66,447	73,207
법인세	591,766	709,374	721,743	555,132	703,963
신고분	471,868	577,630	580,059	423,346	554,679
원천분	119,898	131,744	141,684	131,786	149,284
상속세	67,852	73,589	83,291	103,753	150,062
상속세	23,419	28,315	31,542	39,042	69,447
증여세	44,433	45,274	51,749	64,711	80,614

10 / 31

세목별 실적

(단위: 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부가가치세	670,870	700,091	708,283	648,829	712,046
개별소비세	98,608	104,510	97,191	92,181	93,638
증권거래세	45,083	62,412	44,733	87,587	102,556
인지세	8,958	8,812	8,456	9,652	9,598
과년도수입	43,896	44,298	58,728	41,651	51,465
교통에너지환경세	155,526	153,348	145,627	139,379	165,984
관세	85,292	88,152	78,821	70,585	82,270
교육세	50,084	50,987	51,111	46,937	51,039
종합부동산세	16,520	18,728	26,713	36,006	61,302
주세	30,346	32,609	35,041	30,084	26,734
농특세	38,388	44,175	39,182	62,596	89,000

11 / 31

세수 추계 방법

- 세수 추계는 기본적으로 거시 전제 변수들을 사용하여 OLS 분석을 실시함
 - 세입 추계에 사용되는 변수는 경제 지표, 자산 시장 및 부동산 시장 관련 지표를 사용함
- 매년 OLS regression에 포함하는 변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세수 오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한 모형 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는 없음
- 세제개편안 사항, 코로나19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도별 더미 변수 등을 사용하여 조정한 후, 추계함

12 / 31

세목별 추계 주요 변수

세목별 예측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변수

세목	변수
종합소득세	명목 GDP, 회사채 금리, 자영업자수, 취업자1인당 명목 GDP
근로소득세	취업자 1인당 명목 GDP, 상용임시근로자수, 임금상승률
양도소득세	토지거래량, 토지가격지수
이자소득세	명목 GDP, 회사채 금리
배당소득세	명목 GDP, 유가증권시장 결산법인 영업이익
기타 원천(사업, 퇴직, 기타소득 등)	명목 GDP
법인세	실질 GDP, 회사채 금리, 유가증권시장 결산법인 영업이익, 수출금액
상속세	75세 이상 인구, 토지가격지수
증여세	실질 GDP, 코스피 거래대금, 토지가격지수, 금융자산
부가가치세	실질민간소비,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액

13 / 31

세목별 추계 주요 변수

개별소비세	등유, 중유, 부탄, 프로판, 천연가스, 발전용 유연탄 소비량, 명목민간소비, 실질 GDP, 담배물가지수
증권거래세	코스피 거래대금, 코스닥 거래대금, 코넥스 거래대금
인지세	명목 GDP, 토지거래량
주세	실질 민간소비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경유 소비량
관세	수입액, 수출액, FTA 진행률
교육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비율, 명목 GDP
농어촌 특별세	개소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비율, 명목 GDP
과년도수입	전년도 부가세 미수납액, 전년도 부가세 세수실적
종합부동산세	주택가격지수, 토지가격지수

자료: 저자 작성

14 / 31

추계 업데이트

- 본 예산 추계에 사용하는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되,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의 예측값에 변화가 있을 경우 업데이트 된 수치를 사용
- 세수 진도율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세입 실적을 감안하여 당해년도 세수 추계 갱신에 반영
 - 과거 진도율 자체의 분산(variation)은 크지 않음
 -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거 세수 진도율과 경제 상황 등의 모멘트 값들을 비교하여 추경 예산 추계 혹은 당해년도 세수 추계 갱신에 반영
- 세정지원 효과, 납부 유예 등의 변화도 반영

15 / 31

월별 세수 진도율

〈표 1〉 월별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

(단위: %)

연도	3월	6월	7월	10월	11월	12월
1996	25.23	48.89	61.17	85.86	93.03	99.90
1997	23.60	46.19	57.50	81.56	86.21	96.34
1998	23.15	46.48	57.62	84.55	91.64	98.99
1999	28.92	52.08	64.92	91.83	99.20	105.60
2000	34.53	63.72	77.03	106.02	111.22	116.60
2001	28.93	51.51	62.73	87.69	93.76	99.89
2002	25.99	49.31	61.13	88.73	94.59	100.31
2003	25.37	49.52	61.00	86.82	92.55	99.75
2004	23.78	46.58	57.82	83.49	89.16	96.50
2005	22.82	47.61	59.35	87.05	92.48	100.33
2006	24.39	49.96	62.83	90.21	95.45	102.00
2007	28.38	56.62	69.67	98.39	103.17	109.61
2008	30.31	57.95	70.17	93.00	95.92	101.05
2009	25.69	52.60	64.83	89.58	94.80	100.33
2010	26.96	53.54	66.20	92.06	97.90	104.26
2011	27.07	54.64	66.27	93.61	98.53	102.53
2012	26.74	52.17	63.63	87.62	92.55	98.67
2013	22.50	46.31	58.38	83.92	89.41	96.07
2014	22.50	45.45	57.47	82.07	87.52	94.95
2015	23.25	49.42	62.72	89.24	95.59	101.00
2016	27.48	53.97	66.76	92.69	99.04	104.22
2017	27.83	54.93	67.21	94.36	100.34	105.70
2018	29.39	58.62	70.94	98.24	104.39	109.49
2019	26.45	52.99	64.23	88.34	93.83	99.55
2020	24.85	47.53	60.26	90.72	95.74	102.09
2021	28.15	57.83	71.17			

16 / 31

세수 추계의 정확성

- 세수 추계의 정확성은 모형 자체의 적합성(fitness),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 예측의 정확성에 의해 결정됨
- 세입은 결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모형 선택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보다는, 변수 선택에 의해서 혹은 변수 예측값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높음
- 모든 조건이 완벽하더라도, 모형 자체의 error term(ϵ)에 포함된 관찰되지 않는 변수(unobservables)들의 영향으로 pin-point 예측의 불확실성은 존재함

17 / 31

세수 추계 협조 기관

국세수입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수 추계에 필요한 정보 (변수)들의 예측값은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전망함

- 세수 추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KDI, 한국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임
- 기관별 주요 정보 제공 및 관련 세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 * 기본적인 거시 전제들(GDP, CPI 등)은 한국은행, IMF, OECD 등 국내외 주요 전망 기관들의 수치를 이용함

18 / 31

세수추계 협조 기관

기관별 경제 환경 전망 변수 전망 및 국세의 주요 세목과의 관계

기관	경제 환경 전망 변수	관련 세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실질 GDP • 명목 GDP • GDP 디플레이터 • 민간소비 • 설비투자 • 건설투자 • (통관기준)상품수출 • (통관기준)상품수입 • CPI	• 소득세 - 근로소득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관세
한국노동연구원	• 취업자 수 - 상용직근로자 - 비상용직근로자 - 자영업자 • 임금상승률 - 상용직근로자 • 실업률	• 소득세 - 근로소득세 - 종합소득세
산업연구원	• 주요 산업의 생산, 내수, 수출, 수입 전망	• 법인세 • 개별소비세 - 기타분(자동차 등)

19 / 31

세수추계 협조 기관

자본시장연구원	• 환율 - 원/미국달러 • 금리 - 기준금리 - 국고채(3년) - 회사채(3년, AA-) • 금융자산 규모 - 개인 - 법인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주식시장 - 주가지수 - 주식거래대금	• 소득세 - 이자소득세 - 배당소득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증권거래세 • 인지세 • 관세
국토연구원	• 부동산시장(전국 및 지역별) - 주택매매가격지수 - 주택매매거래량 - 토지가격(지가변동률) - 토지거래량	• 소득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인지세 • 종합부동산세

20 /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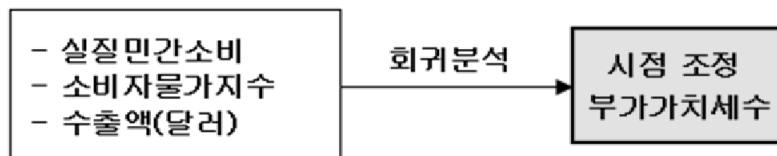
세수추계 협조 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 유가(두바이유) • 유종별 수요량 - 휘발유 - 경유 - 등유 - 중유 - 프로판(LPG, 가정용·상업용) - 부탄(LPG) - 천연가스(LNG) - 부생연료유 - 유연탄(발전용)	• 개별소비세 - <u>유탐분</u> • - 교통·에너지·환경세
----------	--	--

자료: 저자 작성

21 / 31

세수추계 - 부가가치세



- 민간소비, 물가, 수출 등의 변수와 부가가치세 실적 간 시점을 일치시킨 뒤 회귀분석 시행

22 / 31

부가가치세 추정 모형

$$\log(TAdjTax_t) = c + X_t \cdot \beta + \varepsilon_t, \quad \varepsilon_t \sim N(0, \sigma)$$

- X_t : Explanatory variable vector
- ε_t : Error te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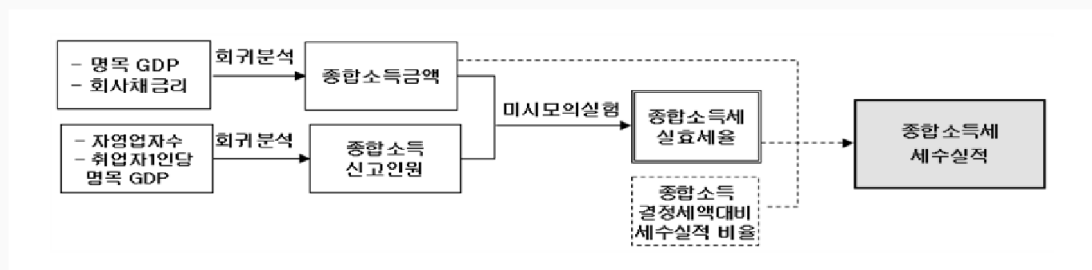
23 / 31

부가가치세 추정 결과

		(1)	(2)	(3)	(4)	(5)	(6)	(7)	(8)	(9)
Estimated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ln(real private consumption)	2.252*** (0.065)	1.787*** (0.440)	1.854*** (0.512)	1.519*** (0.382)	1.523*** (0.450)	1.902*** (0.257)	2.073*** (0.287)	1.736*** (0.236)	1.873*** (0.272)
	ln(CPI)		0.504 (0.472)	0.510 (0.487)	1.424** (0.517)	1.424** (0.536)	0.381 (0.276)	0.391 (0.271)	0.911** (0.329)	0.878** (0.330)
	ln(real plant and equipment investment)			-0.050 (0.178)		-0.003 (0.151)		-0.126 (0.100)		-0.091 (0.090)
	ln(export)				-0.201** (0.073)	-0.201** (0.076)			-0.112** (0.047)	-0.103* (0.048)
Dependent variables:	ln(time-adjusted VAT tax revenue)						-0.146*** (0.026)	-0.151*** (0.026)	-0.125*** (0.024)	-0.130*** (0.025)
	Year 2008 dummy									
	Constant	-17.233*** (0.874)	-13.221*** (3.853)	-13.564*** (4.152)	-9.761** (3.468)	-9.781** (3.782)	-14.206*** (2.251)	-15.095*** (2.317)	-12.137*** (2.153)	-12.941*** (2.293)
	Observation	19	19	19	19	19	19	19	19	19
	R ²	0.986	0.987	0.987	0.991	0.991	0.996	0.996	0.997	0.997
Estimated results of Residuals AR(1) model	First lag of residual	-0.072 (0.249)	-0.100 (0.249)	-0.066 (0.251)	-0.224 (0.244)	-0.223 (0.244)	0.270 (0.236)	0.370 (0.234)	0.290 (0.237)	0.293 (0.240)
	Constant	0.000 (0.010)	0.001 (0.010)	0.000 (0.010)	0.000 (0.008)	-0.000 (0.008)	0.001 (0.005)	0.000 (0.005)	0.001 (0.005)	-0.000 (0.004)
	Observation	18	18	18	18	18	18	18	18	18
	R ²	0.005	0.010	0.004	0.050	0.050	0.075	0.136	0.086	0.085

24 /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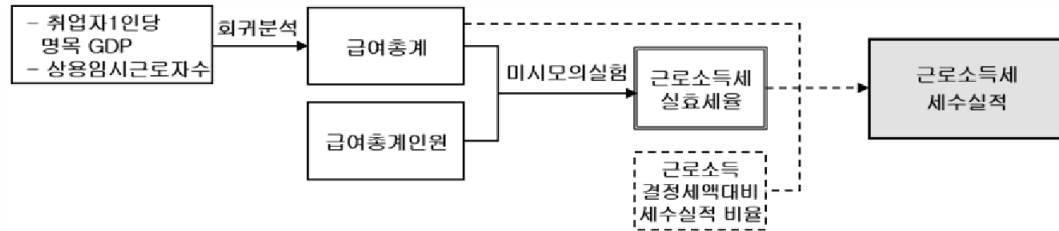
세수추계 - 종합소득세



- 최근 5개년 결정세액 대비 당해 연도 세수실적의 비율 평균값을 활용하여 조정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전망치를 추정 소득세에서 차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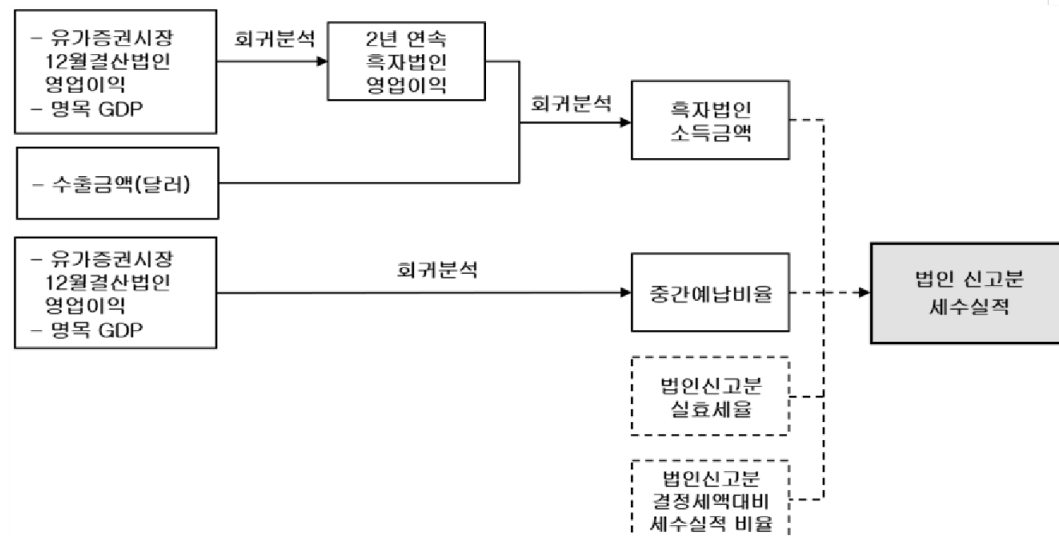
25 / 31

세수추계 - 근로소득세



26 / 31

세수추계 - 법인세 신고분



27 / 31

세수추계 - 관세



- FTA 체결 확대 및 실행 등으로 관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FTA 진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FTA 진행률 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

28 / 31

앞으로의 과제

미시모의실험 모형, 머신러닝 등 Alternatives 도입

- 소득세 및 법인세 추계에 미시모의실험 모형 (세법 개정안 효과 반영, 개별 경제주체 행태변화 반영 등) 도입 시도함
- 다만, 과세 인원 분포의 조정 등에 요긴하나, 예측 자체의 정확성을 올리는 것이 큰 실익이 있는지 불분명함
- 거시 전제 변수들 예측 정확성을 높이고, 모형의 단순화를 통해 직관적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높음
- 추가적인 대안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통한 세수 예측 가능하나, 추후 세수 오차 발생할 경우 설명의 어려움이 존재함

29 / 31

앞으로의 과제

- Alternatives 를 통한 추계 결과를 참고할 수 있음
- 세수 추계의 주기적인 갱신
 - 호주의 경우, 두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기존 추계값과 크게 차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해연도와 차년도 세수 추계를 갱신함
- 세수 추계 전담 인력의 확충 및 거시 전망팀과의 연계성 강화
 - 호주 재무부의 경우, 세수 추계 전담 인력 팀만 30명이 넘고, 거시전망팀과 같은 소속으로 전망 부서에만 50명 넘게 배치하고 있음

30 / 31

앞으로의 과제

- 세수 추계 담당 인력 및 전문가의 human capital 적극 활용
 - 모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빠르게 증가함
 - 정책 담당자 혹은 연구자의 판단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 중요해짐
- IMF "Challenges in Forecasting Tax Revenue", 2022
 - Use judgement to override forecasts based on models or past data
 - Forecasters may need to make (prudent) use of subjective adjustments to account for events which are likely to materialize, and which could be expected to impact revenue, but are not captured by the model

31 / 31

토 론 문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

| 성명재 교수 (홍익대) |

-
- 세수추계: 과거의 세수변동 구조가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또는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구조함수가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세수규모를 결정하는 각종 경제변수(소득, 소비, 투자, 물가, 상대소득분포 등)에 대한 예측치를 바탕으로 미래시점(기간)에 예상되는 세수를 전망하는 것으로 정의
 - 방법론상으로는 거시적 분석방법(예: 세수, 수요 시계열분석 등)과 미시적 분석방법(예: 미시모의실험 등)으로 구분
 - 구체적인 세부분석방법론으로는 회귀분석, 세수탄성치 추정, 연평균 세수증가율 추정, 미시모의실험을 통한 세수추계 등 다양한 방법론이 사용
 - 통상적으로 거시분석에는 회귀분석이 많이 사용되고, 세법개정효과 또는 미시적 세원 분포 분석 등의 경우에는 미시분석방법을 이용한 모의실험모형 등이 많이 사용됨
 - 장단점 비교
 - 미시 세원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의 경우 대체로 거시분석방법보다는 미시분석 방법에 의한 세수추계방법론이 우월한 것이 일반적
 - 반면 장기세수 추세분석에 있어서는 extrapolation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 시계열 회귀

분석을 통한 거시분석이 방법론상 우월한 것이 일반적

- 대립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양자를 병행하는 경우 각각의 단점 보완에 유리

□ 세수추계 예측오차의 원천

- 추계(예측)오차: 주로 거시경제성장률 등과 같이 전망모형·방법 자체의 오차
- 파생 오차: 주로 설명변수의 전망치가 지니는 추계(예측)오차로부터 유발되는 2차성 오차
 - 흔히 GDP, 설비투자, 소비지출, 수출, 수입 또는 가구소득, 지니계수(또는 가구소득 표준편차) 등 미래시점의 세수추계를 위해 투입되는 설명변수 값 자체가 지니는 예측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이차적으로 파생되는 오차
- 기타 요인에 의한 오차
 - 모형설정의 오류, 세원분포의 구조 변화(행태 변화, 인구분포 등의 변화 포함), 세법개정, 외부적 경제충격 등에 의해서도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

□ 일반적으로 세수추계를 위해 투입되는 설명변수 자체가 이미 예측오차(1차성 오차)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세수추계모형 자체가 지니는 본연의 1차성 오차에 추가하여 설명변수가 지니는 1차성 오차로부터 파생되는 이차성 오차도 포함하므로, 일반적으로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성장률 예측오차 등의 경우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태생적 특성을 지님

- 그런데 세수추계에 대해서는 거시경제 전망치보다 더 작은 예측오차를 기대
 -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과도한 기대
- 특히 경제성장률 등 거시전망치의 경우 경제환경이 변할 때마다 수시로 예측 전망치를 수정하지만, 특히 예산상 세수추계치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예측한 당해연도의 거시경제 전망치와 전전년도에 세수실적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의 세수를 예측하고, 동 예측치는 추경 편성이 없는 경우 수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 그러므로 세수추계는 본질적으로 세수 예측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측오차가 클 수밖에 없는 태생적 특성을 보유
- 특히 재산과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세원 자체가

국민계정상 일반 거시경제 변수와 관계없는 변수(지가변동률, 거래빈도, 거래건수 등)로 세수가 실현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측이 매우 어려운 것이 일반적 특성

- 실무에서 세수를 추계할 때 흔히 회귀분석을 통한 시계열·거시분석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세수함수 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 세수전망치를 도출하거나, 또는 회귀분석 등을 통해 추정한 세수탄성치를 최신 세수실적치에 적용하고, 예정된 또는 실현된 세법개정효과 등을 외생적으로 가산(또는 차감)하여 세수를 전망
 - 전자의 경우 장기세수추세선을 따라 장기 평균값을 예측하기 때문에 매기간 세수결산시 예측오차가 클 수 있지만 장기추세를 전망함에 따라 일시적·잠정적 경제충격에 의한 세수변동에는 장기적으로 강건(robust)한 특성을 보이는 것이 장점
 - 후자의 경우 단기적 세수변동을 포착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세수 흐름의 일시적 변동과 구조적 변동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 충격이 발생하거나 사라지는 시점에서 세수예측 오차가 크게 확대되는 것이 단점
- 세원의 변화 추이에 대한 일고
 - 추세적으로 한국 경제는 “인구증가 시대 → 구 정체기 → 인구감소기”로 전환 중
 - 세원도 인구구조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아 점차 (국세)세수의 경상GDP 탄성치가 작아지는 trend로 변화 중
 - 추세적으로는 세수환경이 점차 축소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수환경의 구조변화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방향성은 비선형으로 진전
 - 그러므로 과거의 trend에 따라 미래 세수를 추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향: extrapolation을 통한 예측의 어려움 가중
- 통상적으로 장기추세선을 따라 세수가 증가하지만, 201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장기추세선에서 크게 벗어났다 2~4년 정도 세수가 정체되었다가 급속히 증가하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현상이 시현 중
 - 2010년대 초 세수정체 현상 → 직후 세수급등 → 2010년대 말의 세수증가 둔화 →

2021년부터 세수급등 → 2023년 세수정체 예상 등

- 2023년 국세세수 예산안에서 보듯이 2023년 세수는 2022년 예상실적보다 1% 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을 전망

□ 세수싸이클이 변동될 때 세수정체 → 세수급증 → 세수정체 → 세수급증의 불규칙한 패턴을 반복

- 이런 변화패턴은 사후적 관점에서는 변동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지만, 사전적으로는 여전히 예측이 어려움(경기변동 예측의 어려움과 유사)

□ 세수예측 오차의 분석·평가의 필요성

- 세수예측오차를 원천별로 분해·분류하여 분석하면 세수추계 개선에 도움

○ 세수예측 오차의 예

- 세수추계모형·분석방법상의 오류(오차)
- 설명변수 예측오차에 의한 오류(오차)
- 세법개정 등 사후적으로 제도 또는 구조 변화에 의한 오류(오차)
- 기타 오류

- 두번째와 세번째 등에 의한 오류(오차)는 세수추계 자체의 오류로 보기 어려움

○ 반면 첫번째는 세수추계 개선을 위한 주 target이 됨

- 기타 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원인을 세분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

□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이미 많은 개선노력이 경주 중이며 예전 세수추계 방법에 비해 성과가 높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정다운 박사님)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세수추계 방법론은, 모형의 다양성, 세부정보의 활용성, 세수함수 및 세원분포 등에 대한 상세정보 반영 등을 통해 종전의 방법론에 비해 크게 발전

- 다만 최근 발생한 대량의 세수변동은 예측 자체가 어려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부동산거래 증가, 코로나19 충격, 비대면 경제활동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 위축 및 대기업 경영여건 개선 등과 같이 예전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 전개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세수변동이 발생
- 안타깝지만, 1990년대말, 2000년대말, 2020년 등 거의 10년 주기로 경제위기급 비상상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각각의 특성 차이로 인해 세수영향이 제각각이어서 세수예측이 매우 어렵고, 세수변동 규모 또한 막대한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예측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현실적으로 분석의 한계가 분명하지만 세수추계시 점 추정뿐만 아니라 contingency plan의 하나로 민감도 예측 및 구간 전망 등 세수추계 형태를 다양화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토 론 문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

| 오종현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 |

1. 2021~2022년 세수추계 오차

- ☐ 2021년 국세수입 본예산 대비 세수오차는 61.3조원
 - 개별 세목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오차가 각각 19.8조원과 17.1조원으로 가장 큰 규모
 - 법인세와 자산과세가 전체 세수오차의 80%를 차지
 - 자산과세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 추경예산 대비 세수오차 또한 양도소득세가 11.2조원으로 가장 큰 규모
- ☐ 2022년에도 본예산 대비 50조원 이상의 세수오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세수오차를 반영하기 위해 세입을 경정하였으며, 실적은 추경예산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
 - 가장 큰 폭의 경정이 이루어진 세목은 법인세로 그 폭은 29.1조원

〈표 1〉 2021~2022년 국제수입 전망 오차

(단위: 조원, %)

구분	2021년						2022년			
	규모			오차			오차율		오차 (J-I-H)	오차율 (K=J/H)
	본예산 (A)	추경예산 (B)	결산 (C)	본예산 (D=C-A)	추경예산 (E=C-B)	본예산 (F=D/A)	추경예산 (G=E/B)	본예산 (H)		
총국세	282.8	314.3	344.1	61.3	29.8	21.7	9.5	343.4	53.3	15.5
소득세	89.8	99.5	114.1	24.3	14.6	27.0	14.7	105.8	22.0	20.8
종합소득세	16.5	16.5	16.0	-0.5	-0.5	-3.0	-3.0	21.6	0.0	0.0
양도소득세	16.9	25.5	36.7	19.8	11.2	117.4	44.1	22.4	11.8	52.5
근로소득세	43.5	43.5	47.2	3.7	3.7	8.5	8.5	47.7	10.3	21.5
법인세	53.3	65.5	70.4	17.1	4.8	32.0	7.4	74.9	29.1	38.9
상속증여세	9.1	11.9	15.0	5.9	3.1	64.9	25.8	13.1	2.8	21.2
부가가치세	66.7	69.3	71.2	4.6	1.9	6.8	2.7	77.5	1.8	2.4
개별소비세	10.1	10.1	9.4	-0.7	-0.7	-7.2	-7.0	10.1	0.0	0.0
증권거래세	5.1	8.3	10.3	5.2	2.0	101.6	23.8	7.5	0.0	0.0
인지세	0.9	0.9	1.0	0.0	0.0	1.4	1.4	0.9	0.0	0.0
과년도수입	4.6	4.6	5.1	0.6	0.6	12.1	12.1	6.2	0.0	0.0
교통에너지환경세	15.7	15.7	16.6	0.9	0.9	5.7	5.8	15.4	-4.5	-29.1
관세	8.4	8.3	8.2	-0.1	-0.1	-1.6	-1.4	8.7	1.3	15.2
교육세	5.3	5.3	5.1	-0.2	-0.2	-3.9	-3.8	5.3	-0.6	-11.5
종합부동산세	5.1	5.1	6.1	1.0	1.0	19.9	19.9	7.4	1.2	16.8
주세	3.2	3.2	2.7	-0.6	-0.6	-17.7	-17.7	3.7	0.0	0.0
농어촌특별세	5.5	6.4	8.9	3.4	2.5	62.7	39.3	6.7	0.0	0.0
자산과세	36.2	50.8	68.1	31.9	17.3	88.2	34.1	50.5	15.8	31.3
자산과세 + 법인세	89.5	116.3	138.5	49.0	22.2	54.7	19.0	125.4	44.9	35.8
[총국세 대비 비중]	31.6	37.0	40.3	80.0	74.4	-	-	36.5	84.3	-

주: 자산과세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증합부동산세

자료: 1. 기획재정부,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 보도자료, 2020. 9. 1.

2.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보도자료, 2022. 2. 11.

3. 대한민국정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115572, 제안일: 2022. 5. 13.

○ 양도소득세 또한 11.8조원으로 법인세 다음으로 크게 경정

○ 그다음으로는 10.3조원이 경정된 근로소득세

□ 세수오차가 대체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자산과세에서 발생

○ 법인 영업이익의 변동성은 워낙 크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

- GDP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

○ 자산과세의 세수는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변동 및 거래량이 중요한 영향

-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 또한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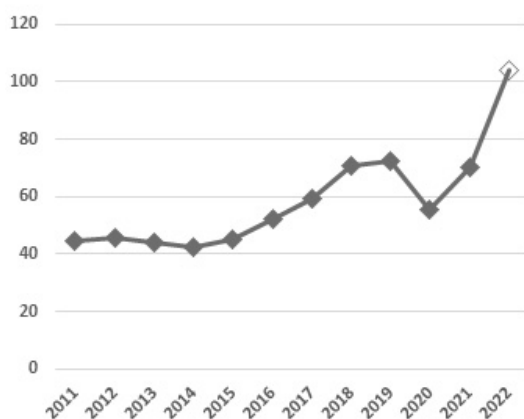
□ 이러한 특징은 오차규모가 아닌 오차율에서 더 극명하게 관찰

○ 2021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본예산보다 2배 이상 견힘

[그림 1] 법인세수와 양도소득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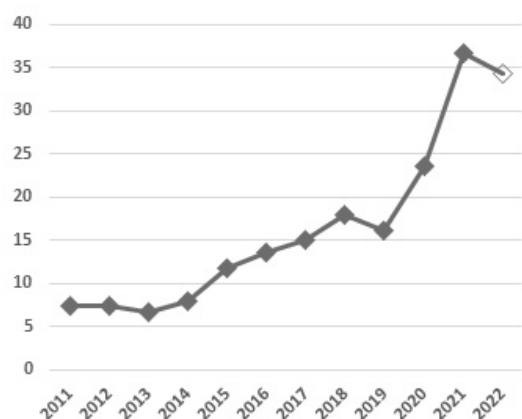
(가) 법인세수

(단위: 조원)



(나) 양도소득세수

(단위: 조원)



주: 2011~2021년은 실적, 2022년은 추경예산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자료

- 법인세수와 양도소득세수의 최근 급격한 증가는 일반적인 시계열 모형으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
 - 세수추계 모형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하는데, 두 세목 모두 과거에 관측되지 않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거나 그걸 것으로 예상
 - 이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수추계 전문가들의 판단을 통해 모형의 수치들을 수정해야만 하는데, 전문가들 또한 과거 경험을 뛰어넘는 증가율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음

- 한편,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서도 세수오차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경제전망의 오차로 일부 설명 가능
 - 근로소득세 추계 시 취업자수가 중요한 설명변수인데, 2021년과 2022년 모두 과소 전망
 - 특히, 2022년 취업자수 전망치는 1년 사이에 50만명 상향 조정돼 노동시장의 변동성 또한 큰 상황으로 이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낮추는 요인
 - 추가적으로 취업자수 전망과 함께 소득분포에 대한 전망도 중요한데, 예상보다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면 이는 모형에 정확히 반영이 되지 않아 근로소득세수가 과소추계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
 - 다만 소득분포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으로 지니계수 등을 통해 소득분포의 최근 추세와 세수추계 전문가의 판단을 반영하여 최종 세수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
 - 근부가가치세 추계의 경우 민간소비와 소비자물가지수가 중요한 설명변수인데, 이에 대한 전망치 또한 부가가치세수를 과소추계하는 요인
 - 특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물가상승은 부가가치세수의 오차를 크게 만드는 요인

〈표 2〉 2021~2022년 거시경제 전망 오차

(단위: %, %p, 만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0년 8월 전망	실제	오차	2021년 8월 전망	2022년 8월 전망	오차
경상 GDP	4.8	6.7	1.9	4.2	5.2	1.0
실질 GDP	2.8	4.1	1.3	3.0	2.6	-0.4
민간소비	3.8	3.7	-0.1	3.4	4.0	0.6
소비자물가	1.0	2.5	1.5	1.5	5.2	3.7
고용률	60.4	60.5	0.1	60.6	61.9	1.3
취업자수 증감	20	37	17	24	74	50

주: 1. 경상 GDP 전망치는 정부의 하반기(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준

2. 그 외 다른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 기준

자료: 1. 관계부처 합동,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0. 6., 2021. 6.

2.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 6.

3.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0. 8., 2021. 8., 2022. 8.

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소득통계/소비자물가지수/경제활동인구,
<https://ecos.bok.or.kr/#/>, 검색일: 2022. 10. 21.

2.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 방안?

☐ 세수추계는 과정을 다음과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경제 전망) 거시경제, 노동시장, 산업, 부동산·주식시장, 에너지수요 등

○ (과세베이스 전망) 경제전망을 기초로 세목별 과세베이스 전망

- 세목에 따라서는 과세베이스 전망이 생략되기도 함

○ (세수 전망) 제도변화를 고려한 실효세율 예측 등을 반영하여 세수 전망

- 모형에 반영하지 못한 변수들이 존재할 경우 결과를 조정 필요

□ 과세베이스와 세수는 세수추계 모형을 통해 전망하기 때문에 모형개선이 세수추계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한계 존재

○ 기본적으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시계열이 충분히 길지 않음

- 시계열 모형의 경우 세수는 연간자료이고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이후 자료만 활용하면 기껏해야 20여개의 관측치로 세수를 추계

- 세법 개정 등 구조적인 제도변화가 있다면 관측치는 더 줄어들

- 이에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변수의 개수에도 한계가 있으며, 너무 많은 변수를 고려할 경우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우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목별로 미시자료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으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한지는 의문

□ 결국 모형에서 도출된 전망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결정

□ 현재는 몇 개의 전문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민간을 포함한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세입예산을 확정

○ 과거에는 세입예산 확정에 민간의 역할이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최근 세수오차의 확대로 민간을 포함한 세수추계위원회가 도입

- 다만, 국내에 세입전망 분야의 전문가가 소수인 관계로 세수추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많지는 않은 실정

○ 사실 과거 또는 현재의 방식은 소수의 전문 인력이 세수를 추계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담당자의 역량에 크게 좌우될 위험이 있지만,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매우 효율적

□ 민간의 역할을 더 확대하고 세수추계 과정을 더 객관화해야 한다면 세수추계위원회를 더 확장해 몇 개의 분과를 두고 세부지표에 대한 전망을 각 분과에서 진행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예를 들어, 거시분과에서 GDP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 전망치 확정

- 거시경제 변수들은 현재도 정부, 한국은행, KDI 등 국내외 많은 기관들이 주기적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전망치들은 세수추계 시 참고하고 있는 상황
- 다만, 많은 전망치들 중 세수추계를 위해서는 각 변수의 전망치를 특정 수치로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시분과에서 객관화할 수 있음
- 가령, 위원들이 각 기관에 대한 가중치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전망치를 확정거나, 몇 가지 대안들을 두고 논의 후 다수의 의견으로 확정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문제는 이렇게 확정된 전망치가 정부 전망치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민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각 기관의 전망 시점이 상이하고, 경상성장률은 잘 전망하지 않는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도 필요

○ 한편, 세수추계를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전망하는 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과세베이스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세부적인 변수들의 전망치도 필요한데, 이러한 전망치를 제공하는 기관은 거의 없음

- 가령, 근로소득세 전망을 위해서는 전체 취업자수 전망이 아닌 상용근로자수, 임시근로자수와 같은 보다 세부적인 전망치를 활용할 필요
- 이러한 변수들은 전문 기관들에 의뢰하여 별도로 전망하는데, 현재는 이에 대한 검증 절차가 거의 없음
- 이에 노동시장분과, 기업분과, 자본시장분과, 부동산시장분과, 에너지수요분과 등에서 세수추계 전제 변수들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세수추계분과는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각 전문기관이 세목별 세수를 전망하고, 민간위원들을 포함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 다만, 이와 같이 세수추계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비효율이 발생하고 경제여건의 급변 등으로 전망치 수정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각 분과별로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충분한지도 의문

3. 구조적 세수에 근거한 세출예산 편성 (아이디어 차원)

- ☐ 발표문에도 있듯이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은 적절한 세출예산을 수립하기 위함
 - 세출은 세입에 근거하여 수립해야 함
 - 하지만 매년 단기 세수추계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
- ☐ 세입의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세출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단기보다는 중기 혹은 구조적 세수에 기준을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매년 세수에는 구조적 세수와 우발적 세수가 혼재
 - 여기서 구조적 세수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하는 등 거시경제 변수 등이 장기 추세 또는 성장 경로에 머물러 있을 경우의 세수를 의미
 - 우발적 세수는 경기의 호불황 등 우발적인 요인에 따른 세수 변동을 의미하며 양의 값과 음의 값 모두 가능
- ☐ 정부는 경기가 호황일 때 예산을 저축하여 경기가 불황일 때 쓰는 것이 원칙
 - 경기가 호황일 때는 흑자재정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고 경기가 불황일 때는 부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으로 경기 안정을 도모
 - 매년 단기세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흑자재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
 - 따라서 우발적 세수를 제외한 구조적 세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이상적
- ☐ 다만, 현재 세수에서 구조적 세수와 우발적 세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2021~2022년과 같이 세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을 경우 구조적인 부분과 우발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을 텐데 이중 어느 정도가 구조적 변화인지는 단기간 내에 알기는 어려움
 - 시간이 흘러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추세 등의 판단이 가능

- 다만, 세출예산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구조적 세수를 추계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할 필요
 - 세수추계의 목표는 구조적 세수와 우발적 세수를 구분하되 중기적으로(가령, 5년 평균) 우발적 세수가 0이 되도록 추계하는 것
 - 마치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단기가 아닌 중기시계에서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과 유사
 - 이 경우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 상 정권 말기 세출예산을 키우기 위해 구조적 세수를 과대추계할 위험도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도 관건

4. 발표문 중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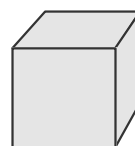
- 발표자가 서술한 바와 같이 미시모의실험모형의 경우 세수추계에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예측력이 높지는 않음
 - 미시모의실험모형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활용 가능
 - 하지만 과거 소득분포에 기반한 모형으로 미래 소득분포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없다면 시계열 모형보다 더 큰 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
 - 미시모의실험모형의 경우 세법개정 효과나 임금·소득 상승과 소득세의 누진적 특성으로 인한 실효세율 조정 등을 위해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
 - 다만, 이 또한 소득분포에 대한 가정 필요
- 발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세수추계는 초단기에측력은 높을 수 있겠지만, 예산안을 위한 세입전망의 예측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
 - 머신러닝 또한 과거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여 세수를 예측하기 때문에 과거에 없었던 패턴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또한 세법개정 등으로 인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도 같이 학습해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변수로 만들어 기계를 학습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

- 세수추계 결과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어렵다는 점도 단점
- 이에 머신러닝 기법이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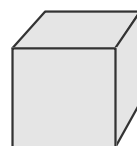
- 경제전망과 세수전망 전문 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것에 동의
 - 한편, 현재의 세수추계위원회와 같이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세수를 전망할 때 전문가들이 직접 세수를 추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이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에 대한 가능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세수추계의 주기적 갱신하는 것은 좋지만 그 목적이 예상보다 세수가 더 많이 걷힐 때 이를 지출하기 위한 것이라면 곤란
 - 외환위기 이후 2007년, 2010~2012년, 2014년을 제외하곤 매년 추경예산 편성
 - 즉, 2015년 이후에는 매년 추경예산 편성
 - 세입이 예상보다 많다는 것은 양의 우발적 세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음의 우발적 세수로 반영될 가능성
 - 따라서 양의 우발적 세수를 바로 지출해 버리면 가까운 미래에 세수가 부족할 경우 부채를 발행하여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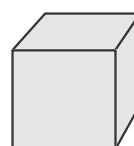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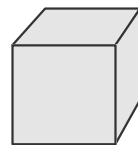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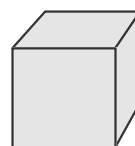
MEMO



MEMO



MEMO



제25회 한국세무포럼 <비매품>

인 쇄 일 2022년 10월 27일

발 행 일 2022년 10월 28일

발 행 인 원 경 희

발 행 처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팀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서초3동 1497-16)
전화 (대표) 521-9544

